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과 관련한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최종철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사무관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추진 배경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역문화진흥에의 노력은 2013년 말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통해 비로소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지역의 문화융성을 원하는 문화예술인, 그리고 지역 곳곳의 도시와 마을에서 살고 있는 국민 모두의 문화적 의지가 담긴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 「문화기본법」에 이어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3대 기본법이 완성된 것이다.

새로이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목표로 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가치와 사회적 유대감에 기반하는 도시적 사회공동체가 더욱 용이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번에 법에 반영된 문화도시의 실질적인 조성은 과거 대규모 재

정이 수반되는 시설 건립, 경관조성 등 하드 인프라 구축에 치중했던 역사문화도시 조성과는 달리 인프라 구축은 최소화하고 도시 내부의 문화적 활동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인프라 확충을 중점 지원하게 되는 형태의 사업이다. 과거의 문화도시 사업이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의 하향식 사업이라는 분명한 차이점을 보이게 될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개념에서 시작되는 문화도시 사업과 병행하여 이미 추진 중인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재평가를 통한 리모델링 작업도 이뤄진다.

문화도시 조항이 「지역문화진흥법」에 들어가게 된 배경으로는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 각 요소 간의 관계회복에 있어 문화의 매개적 작용을 중요하게 인식한 점도 있지만, 17·18대 국회에서 발의된 각 도시별 특별법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법 형태의 문화도시

역사·전통문화도시사업 추진현황

구분	경주 역사문화도시	전주 전통문화도시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비전	1,000년의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	세계와 소통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역사를 재현하는 부여 문화를 창조하는 공주
기간	2006~2035(30년)	2007~2026(20년)	2009~2030(22년)
예산	3조	1조	1조
	국 비 7,662억 원(53%)	국 비 4,112억 원(24%)	국 비 4,001억 원(32%)
	지방비 1조 1,799억 원(35%)	지방비 9,333억 원(55%)	지방비 5,019억 원(40%)
	민 자 4,072억 원(12%)	민 자 3,564억 원(21%)	민 자 3,557억 원(28%)
사업 내용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계승,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등(65개 사업)	한식·한옥·한지·판소리 등 전통문화자원 보존·계승·활용,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65개 사업)	백제왕도 골격의 체계적 회복과 재생, 역사문화자원의 창조적 활용과 자원화 (57개 사업)
국비 지원	222억 5,000만 원 (2006~2009년 매년 40억 원, 2010년 62.억 5,000만 원)	190억 원 (2006~2008년 각각 30억 원, 2009~2010년 각각 50억 원)	90억 원 (2008년 10억 원, 2009~2010년 각각 40억 원)

관련 규정이 필요해진 점도 작용하였다(17대 국회에서 7개 법안, 18대 국회에서 2개 법안 발의 후 회기 종료로 폐기).

한편 문화도시 사업과 함께 추진하는 문화마을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에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없지만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문화도시·문화마을 사업은 성격의 차이이기보다는 문화도시가 시·군·구 단위라면 문화마을은 읍·면·동·리 단위는 규모의 차이로 인식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기본적으로는 각 지역의 성격과 특색을 바탕으로 그 지역만의 문화에 적합한 지역문화 특화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지역문화인력을 양성하는 것 등이 사업의 공통점이다.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주요 내용

문화도시는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 및 발전을 목표로 도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정주 가치 확보, 지역 고유의 문화 활성화와 시민의 참여를 통한 도시문화 형성, 도시의 문화다양성 확보와 창조적 융·복합을 통한 사회생태계 구축,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문화도시 사업유형은 도시가 추구하는 핵심가치 및 문화 활동 양상에 따라 '문화예술중심' '문화산업중심형' '문화자산중심형'으로 구분하게 된다.

문화도시 사업은 본 사업기간 5년이 기본이고 연간 국비를 약 3억 원 지원하며, 지방비를 포함해 5년간 약 40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로 추가 2년간 지원하는 구조다. 추가 지원여부는 사

업 3년차 완료시점에서 중간평가(과정)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문화도시 지정을 희망연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계획승인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심사를 거쳐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문화도시의 내실 있는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의지 및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실적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하도록 하였다. 문화도시 지정은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하게 되는데 문화자원의 현황 및 잠재력, 지자체의 문화환경과 정책의지, 재정자립도 및 지원체계, 조직의 추진력 등을 종합 검토하게 된다. 조성계획은 도시의 특성을 살리고, 환경적으로 친숙하며, 지역의 균형발전이 가능해야 하고, 주민의 호응도나 참여도와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문화도시 사업은 사업 초기 1~3년차에는 도시 문화적 소프트웨어와 지역문화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중심을 목적으로 주로 기획프로그램 사업, 시민공모사업, 창의인재 육성사업 등을 시행한다. 이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4~5년차에는 도시 문화정체성 구축 및 문화도시로서의 정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도시문화 네트워크 사업'과 '문화허브 및 문화거점 구축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문화마을 사업은 지역 내 지리적으로 인접한 마을 안에서 주민의 공동체적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마을단위 중 주민협의체를 통한 문화 활동을 준비 중이거나 잠재역량이 높은 마을이 대상이다.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마을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거나 사업추진을 위한 요건이 갖추어진 마을이거나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해 문화마을로서 활동이 가능한 잠재적 역량을 보유한 마을이 우선 선정된다. 문화마을 사업은 본 사업기간 3년 동안 국비를 포함해 연간 약 2억 원씩 6억 원

문화도시의 유형

유형	기본 지향 목표	도시 주요활동	사업 기대효과
문화예술 중심형	사회와 문화예술의 가치공유를 통한 도시문화의 성장 및 발전	-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동 중심 - 예술의 창조성을 바탕으로 시민중심의 사회문화를 형성·공유 - 이를 도시성장의 원천 동력으로 발전시키는 문화 활동 전개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 발현 ▼ 도시민의삶의 질 향상
문화산업 중심형	사회문화와 산업의 창조적 융·복합을 통한 문화적 도시경제 활성화	-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활동 중심 - 문화와 산업, 그리고 도시민의 생활에너지와 융합하고 효과 창출 - 문화적 측면의 도시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성격의 활동 전개	도시문화적사회 생태계 구축 ▼
문화자산 중심형	지역성에 기반하는 고유문화 특화 및 도시정체성 구현을 통한 사회효과 창출	- 지역성을 강조한 문화관광 중심 - 도시의 고유자산이 가지는 가치를 문화적으로 부각하여 문화효과 창출 - 유·무형적 가치로서의 지역자산 및고유문화를 특화하는 문화활동 전개	문화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도시경제활성화

지정절차 흐름도



을 지원하고, 본 사업 2년차 완료 시점에서 중간컨설팅(과정) 후 인센티브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약 1억 원). 본 사업 초기 1~2년차에는 문화공동체 형성 및 마을 문화사업 전개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주로 '휴먼웨어 구축' '문화사업' '특성화 사업' '일자리 창출 가능사업' 등이 추진된다. 본 사업 전개 3년차에는 마을 자체적 지속을 위한 기반 마련에 쓰일 사업비를 지원하며, 이는 주민참여를 위한 문화 공간 구축사업 등에 투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도시·문화마을 사업추진과 관련해 사업 성장 구조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즉 문화마을에서 문화도시로의 성장구조를 이용하여 단계별 지원하는 방안이다. 각 개별 마을 사업이 확장되어 문화마을을 형성하고, 이를 연결하여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하는 것이다. 문화마을로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룬 마을에 대해 문화도시로의 연계·확장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문화마을이 연계하여 문화도시로 성장하면서 공동체 가치와 문화생태계의 순환구조를 형성해 지역 전체로 효과가 확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실질적인 문화도시·문화마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 문화멘토단을 구성·운영하여 신규 사업 발굴, 사업추진 컨설팅, 전문 분야 조언 등 도시와 마을별 맞춤형 사업지원을 위한 기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멘토단을 중심으로 각 도시 및 마을 사업관계자, 지자체가 참여하는 사업 활성화 목적의 추진협의회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문화멘토단은 중장기적으로 문화도시·문화마을 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조력할 예정이다.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시범사업 계획 및 기대효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3년 문화도시·문화마을 사업을 일반회계로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마지막에 광특회계로 반영되었다. 절차상·시간상 촉박하게 초년도 사업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남원시가 문화도시로, 부여 규암마을과 공주 상신마을이 문화마을로 선정되어 올해 초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남원시의 경우 문화도시 세부계획 수립을 위해 현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위탁하여 연구공역을 시행 중이며,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는 광한루원을 중심으로 남원예촌, 남원 예가람길, 춘향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소리문화 체험마을' '시립 김병중 미술관' '도예촌' 등 문화관광시설에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인, 시민 및 관광객들이 교류하고 체험하는 지역특화 문화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종합적으로 수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화마을로 선정된 부여 규암마을은 조선시대 물산의 집결지이자 일제강점기 이후 1960년대까지 부여의 중심지로서, 산신제·동제 등 마을 전통행사와 근대문화거리의 문화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관광자원화한다. 공주 상신마을을 웃다리 농악 등 전통 문화와 계룡산 철화봉청사기 등을 결합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탐방로 조성도 추진한다.

올해 추진하는 문화도시·문화마을 사업은 과거 역사·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에 이은 제2기 문화도시 사업의 시범 사업적 성격이 강하다.

올해 사업은 3월 14일 문화도시·문화마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약 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되었다.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5월 말까지 광특예산을 신청하면 6월 초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내용을 심사한 뒤 문화도시·문화마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 그 결과를 6월 20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이 특색 있는 지역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및 지역 자체가 고유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한다. 2017년까지 문화도시 15개, 문화마을 50개를 선정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